

與 “박대통령이 특검 임명”...野 “말이 되나”

‘최순실 특검’ 방식 협상 신경전...합의 못해

새누리 “상설 특검 하자”...민주당 “별도 특검으로”

국민의당 “특검 반대”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27일 ‘최순실 특검’의 방식을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박완주 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상설특검(興), 별도특검(興)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제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도읍 수석은 모두발언에서 “2014년 6월에 발표된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 수사대상이라는 의결이 나면 최단 10일 이내에 특검이 바로 발동될 수 있는 제도”라며 상설특검법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완주 수석은 “검찰의 능력 수사 등 때문에 상설특검으로 할 수 없

다”며 “청와대도 특검 대상에 포함되는 데 상설특검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게 된다”고 과거의 별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당은 김관영 수석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하고 대통령이 사실에 입각한 진상에 대해 말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에서 상설특검을 말하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상설특검은 과연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져질 것”이라며 “만약 특검을 한다면 민주당과 같은 방식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시간 가량 공개 및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고 조만간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재협상에 나서더라도 이견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가장 중요한 특검의 형태부터 여야가 맞부딪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4년 제도화된 이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한 상설 특검을, 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별도 특검’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 추천권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인 등 7명으로 이뤄진 특검후보추천위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별도 특검법에서는 추천권도 여야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별도특검을 하면 야당이 추천권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내국동 사저 부지 의혹사건 특검’ 때는 이례적으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추

천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수사 기간도 문제다. 상설특검은 임명일로부터 최대 11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지만, 별도특검은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수사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최 씨를 비롯한 다른 관련자들은 큰 쟁점이 없지만,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금지돼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란·외환죄 외에 대통령이 제3종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규정을 내세우며 일축하고 있다. 수사도 소추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의당이 여전히 특검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자칫 특검 도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與 “개헌특위 설치 논의하자”

정진석 “최순실 파문은 기폭제”...잠룡들 개헌 토론회

최순실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최순실 비리 의혹 사건은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 한다”며 “야당과 국회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일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 명백함을 공감하고 있다. 개헌을 머뭇거리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여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중권 전 비상대책위 대표는

이날 개헌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제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끌고 가는데 효율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 동력이 떨어진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종결, 헌법에 대한 공격을 바꿔주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 발전에 보다는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각제 도입을 강조했다.

4년 대통령 중임제에 대해선 “4년 중 임제를 하려면 개헌할 필요가 없다”며 “죽어도 대통령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선거 때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을 하면 나라가 더 불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제에 아주 생각 안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정계에 복귀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해공 신익희 기념 토론회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개헌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6공화국의 종언을 고하고 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대통령 부산행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참석

‘하야 시위’ 대학생 2명 연행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파문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연설문 사전입수’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국민 사과 이후 외부일정을 소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도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경제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금보다 더 앞장서서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불요불급한 사업, 단기적인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 앞에서는 대학생들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35분께 대학생 6명은 미리 준비한 ‘박근혜는 하야하라’ #나와라 최순실 #탄핵 박근혜라고 적은 현수막을 펼치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이에 대학생들은 현수막에 있는 내용을 시민들을 향해 외쳤다. 경찰은 현장에서 남녀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부산 찾은 박대통령...썰렁한 행사장

빈자리가 많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최근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시국 탓인지

/연남뉴스

박지원 “박대통령, 청와대로 재벌 불러 미르 협조 요청”

靑 “사실 아니다” 부인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미르와 K스포츠헌단의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 회장을 청와대 관저로 불러서 미르와 K스포츠헌단의 사업계획서를 보이면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인도,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이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박 대통령이 협조를 요청하면서 ‘전화가 같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자 청와대 안중범 정책조정수석이 (회장 재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갈취하고, 더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헌법상 대통령을 형사 소추할 수 없

다면 수사는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내용을 진술하게 밝히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대통령께서 관저로 재벌 총수들을 부른 적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그런 사실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